

‘농지 은행’ 지원 확대 농촌 이탈 막는다

농어촌公, 1조2000억원 투입
농지 구입·임차 부담 덜어줘

한국농어촌공사가 다음 달부터 ‘농지은행’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농사를 지으려는 청년 농민, 퇴직자 등이 더 넓은 농지를 확보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농지은행은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일종의 ‘농지 플랫폼’이다. 2005년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었다.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고령 농업인 등이 보유한 농지를 사들이거나 빌려서, 농업을 하려는 청년 등에게 팔거나 임대하는 사업이다. 청년 농업인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농지를 확보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현재는 농지은행에서 최대 10만㎡(약 3만평)까지 농지를 사거나 빌릴 수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그 규모를 15만㎡(약 4만5000평)까지로 50% 확대한다. 15만㎡는 축구장 21개와 맞먹는 규모다. 이를 위해 농어촌공사는 올해 1조2400억원을 투입한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영농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남 강진군의 경우 최근 메주콩 재배가 인기를 끌면서 재배 면적이 지난해 176만㎡(약 53만3000평)에서 올해 360만㎡(약 109만1000평)로 두 배가 됐다. 차영숙 강진군 친환경농업팀장은 “메주콩을 재배하면 벼 농사를 하는 것보다 두 배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며 “농지를 더 사들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는 농민이 많다”고 했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은행의 지원 규모를 확대해달라는 농민들의 의견이 많아 제도를 손봤다”며 “농사짓는 땅이 넓으면 소득이 늘어나고 그만큼 농촌을 떠나는 비율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조홍복 기자